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영구채 등 발생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2. 단기금융업자 본인 요건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류성재 / 김영진
	담당부서 (과)	자본시장과 공정시장과		직급	사무관
	국장	이윤수		연락처	02-2100-2652, 02-2100-2681
	과장	변제호 / 박재훈		이 메 일	dapasj@korea.kr , youngsmile@korea.kr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구채 등 발생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2.규제조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제1항제3호																		
	3.위임법령	자본시장법 제161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9.3.~10.1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20.10월) 및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21.1월)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 영구채의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발행 내역이 적시에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 관련 주요사항보고 사유에 '영구채 발행'을 추가																		
	8. 피 규제 집단 및 이해 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h>의견 수렴방식</th><th>의견내용</th></tr><tr><td>피규제자</td><td>상장법인 등</td><td>-</td><td>입법예고</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투자자 등</td><td>-</td><td>입법예고</td><td>-</td></tr></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상장법인 등	-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투자자 등	-	입법예고	-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상장법인 등	-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투자자 등	-	입법예고	-																
9.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건부 자본증권과 본질적으로 성격이 유사한 영구채에 대해서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정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익)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 강화로 투자자보호 수준이 제고 될 것으로 판단○ (비용) 별도의 비용 발생은 없음																		
기타	11. 일 물 설 정 여부	X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사유 등) ① 법 제16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말한다) 행사에 따른 자본의 변동 등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사유 등) ① ----- ----- ----- -----. ----- ----- ----- ----- ----- ----- ----- ----- ----- ----- ----- -----.
1.·2.(생략) <u><신설></u>	1.·2.(현행과 같음) 3. 만기의 영구성, 이차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갖는 채무증권의 발행
② ~ ④(생략)	② ~ ④(현행과 같음)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12년 이후 영구채*가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매년 2조원 정도 조기상환 발생

* 영구채는 신종자본증권으로 만기가 30년 이상이면서 원리금 상환을 발행사가 임의로 연기할 수 있는 회사채이나, 통상 발행 5년후 조기상환되고 미상환시 금리 가산

** ('19년) 2.2조원 → ('20년) 2.1조원 → ('21년) 1.8조원

- 회사는 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기상환을 하고 있어 부채비율 증가 등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나,
 - 사모로 발행되는 영구채의 경우 발행내역이 적시에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영구채는 조건부자본증권과 유사하나, 조건부자본증권과 달리 주요 사항보고 제출대상이 아니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선이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 영구채의 경우 기업의 높은 금리 부담* 등으로 장기적 재무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 일반회사채 금리는 통상 2.7%이나(3년만기 무보증사채 A- 기준), 영구채는 4.6%(공시 기준)로 1.9%p가 높음

- 영구채 발행시에는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형태보다는 주요 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적시에 정보를 전달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상장협, 코스닥협, 거래소,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금융감독원 등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1.14일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제도개선안에 반영
투자자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	진행 중

3. 기대 효과

- ☐ 공시 사각지대 축소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투자자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규제목적)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사업보고서 등 정기적인 공시에 의한 정보만으로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부족하기 때문에
-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정보를 기업들이 수시로 공시하도록 할 필요
 - 기업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 (규제수단) 현재 성격이 유사한 조건부 자본증권의 경우 이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므로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시 규제수단도 적절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X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미국) 직접적 금전채무 또는 부외채무의 부담을 가속화하거나 증가시키는 사안에 대해 수시공시 의무를 부여(SEC Form 8-K)
- ☐ (일본) 재정상태, 경영성적 및 현금흐름의 상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의 발생을 수시공시 사유로 규정(기업공시에 관한 내각부령)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도 자본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부 자본증권 등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 또한, 현행법상 영구채 발행시 증권신고서(공모) 또는 주요사항 보고서(사모)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행 후에는 정기적으로 사업 보고서에 영구채 발행실적을 공시하고 있으므로 피규제자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해당 규제는 시장의 신뢰회복 및 투자자의 안정적 투자기회가 확대되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규제 집행가능성

☐ 행정적·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여건상 규제집행에 어려움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외 경영환경도 급변하면서 기업·투자자간 소통채널로서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 투자판단에 필요한 공시를 확대하여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공시의무는 완화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21.1월)하였음

2. 향후 평가계획

- ☐ 주요사항보고서 공시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시로 점검할 계획

3. 종합결론

- ☐ 금번 개정안은 조건부 자본증권과 본질적으로 성격이 유사한 영구채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단기금융업 본인 요건 관련 세부 규정 마련		
	2.규제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조제5항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제2항제6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9.3.~2021.10.1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단기금융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을 요구하지 않아, 불건전한 업자가 단기금융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우려		
	7.규제내용	○ 단기금융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 규정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증권회사 ○ (이해관계자) 투자자		
	9.규제목표	○ 보다 건전한 업자로 하여금 단기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 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사항 없음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기타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6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건전한 재무상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가. 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은행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나.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 :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p>⑤ · ⑥ (생략)</p>	<p>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p> <p>라.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p>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p>
-------------------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금융투자업 인가시 본인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 심사(자본시장법 §12②6의2, 승 §16⑧)
 - 한편, 단기금융업 인가시에는 본인 재무·사회적 신용요건 심사 관련 규정 불비 →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유동수 의원·이영 의원안 등 통합한 정무위 대안, '21.6월)을 통해 단기금융업자 본인 요건 마련
 - *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중 준법성 요건(금투업규정 별표2 제3호 라목)을 적용하여 본인 사회적 신용 관련 내용을 확인
 - 개정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자 본인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요건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위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단기금융업 본인 요건 관련 세부 규정 마련
	내용	자본시장법 위임에 따라 단기금융업 인가시 본인에게 요구되는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규정

○ 규제대안의 비교

- 1) 현행유지안 : 본인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요건의 구체적 내용을 보지 않아, 불건전할 수 있는 업자의 시장진입을 허용 가능 → 투자자 피해 초래 우려
- 2) 규제대안1 : 사회적 신용 요건 등이 입증된 보다 건전한 업자로 하여금 단기금융업을 영위토록 함으로써,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 강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자본시장법 개정 및 동 시행령 개정안 마련시 금융투자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수렴 예정

3. 규제목표

- ☐ 보다 건전한 업자로 하여금 단기금융업을 영위토록 함으로써, 시장 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다음 측면에서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① 금융산업과 시장의 건전성 제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의 목적 등을 고려시 단기금융업자 본인에 대한 심사요건 추가는 반드시 필요한 측면
- ② 특히,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만큼, 단기금융업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아님
- ③ 아울러, 단기금융업을 희망하는 회사 또한, 동 규제로 인한 부담과, 동 업무 영위에 따른 수익성을 비교·형량하여 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일방적인 규제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 사항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감원의 인가요건 심사 등을 통해 규제 충족 여부에 대해 사전 점검할 수 있는 만큼,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충분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집행에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경과

- ☐ 동 법 개정과정과 동 시행령 개정안 입안과정에서 금융투자협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음

2. 향후 계획

-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할 계획

3. 종합결론

- ☐ 상위법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보다 자격을 갖춘 업자로 하여금 단기금융업을 영위토록 하여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제도 개선 필요성 인정